

**“인터넷에서 무허가 축사  
개선상담 받으세요”**  
축산환경관리원, 주요사례 등 관련정보 제공

무허가 축사 개선 인터넷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전문 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재)축산환경관리원은 1월 5일부터 홈페이지(<http://ilem.or.kr>)를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개선과 관련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개선과 관련해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이 지난해 11월 12일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포됐으며 지난해 11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6회에 걸쳐 전국 순회 교육도 실시됐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와 관련, 전국 무허가 축사의 현황조사자료 분석, 순회 교육지원, 전화상담소(070-4289-2310) 운영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이번에 개설한 무허가 축사 인터넷 상담소는 주요 개선 사례와 상담내용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허가 축사 개선에 관한 인터넷 상담신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 내 ‘무허가 축사 상담소’ 아이콘 및 E-정보관 내 ‘무허가 축사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농가의 상당수

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있는데 가축분뇨법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폐쇄, 사용중지 명령 등의 규제조항이 있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모두 적법화해야 한다”면서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농가 입장에 서서 무허가 축사를 개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축산농가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 농수축산신문 홍정민 기자 [2016. 01. 06]

**경남도, 올해부터  
닭·오리 도축검사 공영화 실시**

경남도는 올해부터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검사를 위해 기존 포유류(소·돼지)에서 가금류(닭·오리 등) 도축장까지 도축검사 공영화를 확대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닭·오리 도축검사업무를 업체소속 지정 책임수의사가 검사를 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내 가금류 도축장 4개소 대해서 도 소속 공무원이 배치돼 검사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공영화 제도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도축검사 수수료 징수기준(닭 7원, 오리 10원)을 마련했다.

또 2회에 걸쳐 도축검사 관련 공무원 및 도축장 경영자와 도축검사 개시시간, 도축검사 수수료 징수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닭·오리 도축검사 공영화 제

도 시행으로 연간 1억 원 정도의 세입(수수료) 증대가 예상된다”며 “도 소속 공무원의 도축검사를 통해 검사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들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2016. 01. 05]

## 올해 군 급식 공급 축산물 '2000톤' 규모 ... 전년비 공급량·횟수 증가

올해 군 급식에 들어가는 축산물이 확대 공급된다. 늘어나는 군 급식 축산물 양은 2000톤 정도다.

국방부와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2016년도 군 급식 방침 및 급양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군 급식 축산물의 급식기준량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공급되는 군 급식량은 한우고기의 경우 1인 1일 기준 2015년 20g에서 2016년 21g으로, 닭고기는 62g에서 67g으로, 계란은 월 21개에서 23개로 확대 공급된다. 또한 한우갈비는 연 3회에서 4회로, 삼계탕은 연 3회에서 4회로, 오리고기는 연 12회에서 16회로 각각 확대 공급된다.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이해와 적극적 협조아래 이뤄진 이번 결정은 축산 강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농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16. 01. 08]

## 전남도, 야생철새 도래지 인근농가 AI 선제적 방역 강화

전남도가 야생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도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전국적으로 H5형 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해남 소재 오리농장에서도 동일형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 도래지에 대한 ‘AI 선제적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철새 도래지 10개소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인근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탐조객 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축사 소독, 농장 출입 통제, 축사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 흘린 사료 방치 여부 등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매주 1회씩 점검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고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소독 설비 미설치 등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겨울철새가 본격 서식하는 시기 등을 감안할 때 고병원성 AI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농장을 소독하고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무안 최상기 기자 [2016. 01. 08]

## 안성시, AI 중복발생 오리농가 미입식 손실보상 ... '전국 처음'

경기 안성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AI 중복발생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미입식 손실보상 사업을 실시한다고 1월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 이내 중복발생농가와 안성천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7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오리를 사육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는 4,500만 원을 들여 오리 1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매년 AI가 발생하는 충남 천안(충남 오리사육의 60% 이상), 충북 진천·음성(충북 오리사육의 85% 이상)과 인접해 있어,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 AI감염 위험률이 높은 곳이다.

실제 안성시는 지난 2003~2015년 국내에서 6차례 AI 발생할 때마다 매년 감염농가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인 AI 예방과 차단을 위해 손실보상금 지원이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며 “향후 추이를 보아 철새도래지 인근 오리농가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 뉴시스 [2015. 01. 14]

겨울철에는 소독제 선택과 사용요령에 좀 더 철저한 준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많은 오리사육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했음에도 고병원성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소독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전국 오리농가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시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소독제 선택과 사용 요령’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검역본부가 고시한 요령에 따르면, 겨울철 낮은 온도(4℃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소독제 효력이 저하됨으로 사용설명서에 따른 희석 비율을 고농도(유기물조건)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저온에서는 이소시안산나트륨, 3종염 등 산화제계열 또는 알데하이드계열 소독제를 장려했다. 산화제 중 치아염소산은 유기물 조건에서 그 효과가 급격히 떨어짐으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화학적 특성이 다른 계열, 예를 들어 산성제와 염기성 제제를 혼용하지 말아야 한다.

김병은 회장은 “현장에서는 사용용도와 지침에 맞게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관에 소독제 기능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AI로 인해 오리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접근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1. 15]

## 겨울철 AI방역, 소독제 용법 준수를

## 한국가금학회 설립 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7일자로 사단법인 한국가금학회(대표 모인필·사진) 설립을 허가했다.

농식품부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금학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가금학회 사무소 소재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 1길 114이며, 대표자는 모인필 충북대 교수이다.

모인필 대표는 "가금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학술정보와 기술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가금학 및 가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금학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6. 01. 15]

리 등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검사 공영제를 올해부터 도내 전체로 확대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도내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10곳 모두에 검사 담당 공무원 11명을 배치했다. 조기 정착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각 도축장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도축된 가금축산물의 안정성을 검사하게 된다.

종전에는 해당 도축장에서 고용한 자체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 축산물의 안정성 여부를 판정했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도축장 영업자가 시행하는 자체 검사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삼계탕 등 닭·오리로 가공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했다.

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내 도축장 순차적으로 검사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검사 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다.

경기도내 가금류 도축장은 남부에 6곳, 북부에 4곳 등 총 10곳이 소재해 있다.

▶ 헤럴드경제 박정규(수원)기자 [2016. 01. 20]

## 경기도, 도축 닭·오리 공무원이 직접 검사한다

올해부터 경기도내에서 도축하는 모든 가금류의 위생검사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시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실시해왔던 닭·오

## 사조그룹, 중국산 훈제오리 유통 ... 오리업계 강력 규탄

오리 계열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조그룹이 중국산 훈제 오리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

어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조그룹은 오리 계열화 사업을 담당하는 '사조화인코리아'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룹 내 또 다른 계열사인 '사조오양'을 통해 중국산 오리 훈제육을 유통시장에 판매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사조오양에서 유통시킨 중국산 오리 훈제육인 '순살 통오리 훈제'는 현재 옥션과 11번가, G마켓, 농협마켓 등에서 900g 기준 1만5000원선에 판매됐다. 국내산 오리 훈제육인 '슬라이스 통오리 바베큐'는 1kg 기준 2만8000원 선으로 중국산이 국내산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한국오리협회는 1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입산 오리고기 제품 판매 중단과 대국민 사과, 수입 오리고기 제품 전량 회수 및 폐기, 국내 오리 사육 농가 보호 대책 발표 등을 요구했다. 이강현 오리협회 전무는 "오리 계열화 사업을 하는 사조그룹이 수입산 원료육을 수입한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유통된 수입 오리고기 제품은 국내 제품과 포장까지 비슷해 국산 오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사조오양의 수입산 오리고기 판매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조그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이를 통해 "사조그룹의 오리고기 수입·판매 행위는 오리농가 뿐만 아니라 전국 축산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수입내용의 철저한 공개 △축산인들에게 대한 공개 사과 △그룹차원의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축산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축산 관련 단체는 물론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사조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강력한 항의 집회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업계의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이창주 사조화인코리아 대표는 "사조그룹에서도 사조오양의 중국산 오리 훈제육 수입 사실을 몰랐으며, 그룹 차원에서 사조오양에 엄중 경고했다"면서 "유통된 제품들은 모두 수거해 폐기할 예정이며, 향후 이 같은 수입품 판매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 안형준 기자 [2016. 01. 22]

## 종오리 · 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신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오리질병 관리를 위해 종오리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신설한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국내에서 고병원성AI의 지속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오리농가에 정형화된 방역관리요령 없이 필요할 때마다 질병관리를 해왔다고 밝히고, 체계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종오리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종오리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으며, 2월 중 회의를 거쳐 행정예고 후 올해 3월 최종 고시 ·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리협회 측은 의견수렴기간에 AI 이외의 리메렐라, 간염 등 다른 오리질병을 추가하고, 향후 오리질병 연구를 통해 기타 질병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연 4회)로 실시하는 전국 종오리 AI

일제검사에서 종오리 채혈에 따른 오리폐사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밝히고, 채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달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전국 종오리 AI 일제검사는 분기별로 AI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종오리 분변, 종란 또는 혈액을 채취하는 데, 육성 중인 종오리는 혈액을 채취해야한다. 이때 평균적으로 사육 동별로 20수씩 채혈을 하는데, 이후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피해가 막대하지만 지금까지 별도의 보상 없이 검사를 진행해 농가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오리협회측은 매월 항원검사는 실시하되, 항체검사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항체검사를 종란으로 대체하거나, 육성중인 오리를 도태 시 출하 전 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도태 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다음 육성종오리에 대해 산란 전까지 채혈을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김병은 회장은 “종오리·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오리농가의 질병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고, 채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면 농가피해도 줄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1. 27]

### 수입오리 판매중단 경고에도... 사조그룹 ‘묵묵부답’ ... 오리협 ‘강경대응’



최근 오리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가 사조그룹에 수입산 오리고기 판매중지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오리협회에서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지난달 1월 26일 사조그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거듭 발표하고, 수입산 오리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대규모 집회 및 불매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국오리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사조그룹 내 오리계열회사도 업계불황으로 오리고기가 체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사조오양이 값싼 수입오리훈제를 판매해 지난 1월 15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사조그룹에 ▲수입 내역 모두 공개 ▲대국민, 축산인에 대한 공개 사과 ▲시중 판매·유통 수입 오리고기 전량 회수 및 폐기 ▲그룹차원의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이후, 사조오양에서 온라인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이라 오리협회 측에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몰에서 수입산 오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수입산을 찾는 기존 거래처의 요구로 부득이 공급했다는 것이 사조오양의 입장이다.

이에 오리협회는 지난 1월 26일 거듭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AI가 2년여 간 지속되면서 오리고기 소비와 가격은 폭락하고, 냉동재고량은 체화된 상태에서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풍전등화의 오리산업의 어려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조그룹은 계속해서 값싼 수입오리를 판매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또한 “산업의 어려움을 사조그룹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오리농가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수입산 오리판매를 중지하고 전국 오리농가에 사과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사조그룹은 오리업계의 절규를 무시한 대가를 달게 받길 바라며,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사조그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업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사조오양 측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오리협회 이사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이사회는 “업계불황인 상황에서 수입오리를 판매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해명을 듣는 것은 수입오리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날 이사회는 사조오양 측에 ▲인터넷 판매 등 판매행위 즉각 중단 ▲보유재고는 즉시 수거해 오리협 입회하에 폐기 ▲사조 그룹차원 재발방지 공식약속을 통보하고, 지난 1월 29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 후에도 답변이 없으면 오리협회는 2월 2일부터 축산단체와 공동으로 사조그룹 앞 대규모 집회와 동시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자택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 대국민 사조제품 불매운동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1. 29]

